

지방직 7급 기출

지방자치론

해설 : 이동호 교수

본 문제의 해설 소유권 및 판권은 (주)월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. 무단복사 판
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-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문 1.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법체계와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규범형식에는 조례와 행정규칙이 있다.
- ③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.

해설 ④

- ①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헌법이다.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“지방자치단체는 …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여 자입법권을 보장하고, 지방자치법 등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범의 규범형식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.
- ③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

문 2. 현행 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규정된 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
- ②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기능 분산
- ④ 주거 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

해설 ③

제18조(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)

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,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체계의 적정화
2.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
3.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
4.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

제19조(과소 구의 통합)

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,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.

문 3.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성 비율
- ③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
-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의 배분비율

해설 ③

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기관통합형, 기관대립형이나 여부는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다. 지방분권의 수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련된 사안이며, 기관 구성은 지방정부 내부의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다.

문 4. 아른슈타인(S. Arnstein)이 구분한 주민참여의 8단계 모형에서 주민이 권력을 갖는 실질적 참여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주민통제 ② 상담
③ 귀하위임 ④ 협동관계

해설 ②

상담(consultation)은 형식적·명목적 참여로 볼 수 있다.

문 5. 주민참여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정책 순응의 확보와 주민자원의 활용
- ②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제고
- ③ 행정과정상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책임의 명확화
- ④ 대의정치의 한계 보완

해설 ③

과도한 주민참여는 행정지체와 비효율을 초래하며, 책임회피 내지 전가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.

문 6. **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?**

-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
- ② 주민의 감사청구제도
- ③ 주민소환제도
- ④ 주민참여예산제도

해설 ④

주민참여예산제도는 「지방재정법」에 그 근거규정이 있다.

문 7. 광역행정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광역연합
- ② 사무위탁
- ③ 행정협의회
- ④ 지방자치단체조합

해설 ①

광역연합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.

문 8.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.
-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, 그 밖의 지역에는 읍·면을 둘 수 있다.
-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 두는 읍·면·동의 폐지·분합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.
-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도지사가 임명한다.

해설 ③

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지합병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, 도지사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).

문 9.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행정구역 및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는 읍·면·동을 둘 수 있다.
- ② 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을 둘 수 있다.
- ③ 기초자치단체인 군에는 행정계층으로서 읍·면을 둘 수 있다.
- ④ 우리나라 자치계층구조는 예외 없이 중층제로 되어 있다.

.....
해설 ④

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.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자치계층구조가 단층제로 되어 있다. 문 8 ①지문을 참고하라.

문 10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
-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- ③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- ④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
해설 ①

①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.

지방자치법 11조(국가사무의 처리제한)

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외교, 국방, 사법(司法), 국제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
2. 물가정책, 금융정책,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
3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
4.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, 국가하천, 국유림, 국토종합개발계획, 지정항만, 고속국도·일반국도,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
5. 근로기준,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
6. 우편,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
7.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·연구, 항공관리, 기상행정,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

문 11.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포괄적 배분방식은 사무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없이 사무처리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.
- ②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다.
- ③ 우리나라는 사무배분 방식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.
- ④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무영역을 침범하기 어렵다.

해설 ④

포괄적 배분방식은 융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, 각 자치단체간에 기능배분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한계도 모호하여 사무처리의 중복이나 상급단체의 지나친 통제·감독을 초래하기 쉽다.

문 12.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치경찰의 사무 중 재해재단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무도 있다.
- ② 치안행정위원회는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.
- ③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경찰단장이 겸한다.
- ④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해설 ③

치안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문 13.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는 지방의회가 의결한다.
- ③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.

해설 ②

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·의결한다.

문 14.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도시분쟁조정위원회
- ② 환경분쟁조정위원회
- ③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
- ④ 헌법재판소

해설 ①

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. 중앙분쟁조정위원회,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.

문 15.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감사는 시·도의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.
- ② 행정감사는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해야 한다.
- ③ 행정조사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.
- ④ 행정조사는 실시 시기에 제한이 없다.

해설 ③

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문 16.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사무감사권
- ② 재의요구권
- ③ 선결처분권
- ④ 대집행권

해설 ④

지방자치법 170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·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·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, 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.

②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·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「행정대집행법」을 준용한다.

문 17. 현행 지방자치법상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
- ② 시·도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시·도지사
- ③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
- ④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

해설 ④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(訴)를 제기할 수 있다.

문 18.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 산정지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치단체별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.
- 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고 있다.
- ③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않아 재정력 파악이 곤란하다.
- ④ 지방채는 자주재원으로 포함되기도 했다.

해설 ②

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며, 특별회계는 제외되어 있다.

문 19.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·군세로 구분된다. 시·군세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취득세
- ② 지방소득세
- ③ 자동차세
- ④ 담배소비세

해설 ①

취득세는 도세, 특별시·광역시세에 해당한다.

문 20.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·광역시·도세이며, 지방소득세는 시·군·구세이다.
- ② 최근 유사·중복 세목이 통폐합되어 현재 보통세 8개와 목적세 3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.
- ③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.
- ④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·광역시·도세이며, 등록면허세는 시·군·구세이다.

해설 ③

- ① 지방소득세는 특별시·광역시세, 시·군세이다.
- ②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.
- ④ 등록면허세는 도세, 자치구세이다.

